

“2026년 재도약 원년… G마켓, 국내 1등 오픈마켓 오를 것”

현장르포

G마켓 미디어데이

셀러지원 등 연간 총 7000억 투자
셀러 부담 ‘할인쿠폰 수수료’ 폐지
컨설턴트 100여명 중소셀러 지원
신세계·알라바바와 역직구 활성화

G마켓이 국내 오픈마켓 1위탈환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새 수장으로 취임한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는 21일 미디어데이를 갖고 ‘글로벌-로컬 마켓(Global-Local Market)’이라는 새 비전을 발표하며, 5년 내 거래액(GMV)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85년생으로 알라바바의 동남아 플랫폼 ‘라자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장 대표는 “G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올라서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G마켓은 202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셀러 지원 5000억원 ▲고객 혜택 1000억원 ▲인공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대표가 현장에서 G마켓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G마켓

지능(AI) 기술 1000억원 등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투자를 집행한다.

◆“셀러 부담 확 줄인다”

‘로컬 마켓’ 전략의 핵심은 “셀러의 성장이 곧 플랫폼의 성장”이라는 기초 아래 판매자 수익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변화는 셀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할인쿠폰 수수료’를 10월 31일부터 전격 폐지하는 것이다. G마켓 이민규 영업본부장은 “연간 500억원에

달하던 셀러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스마일데이 같은 대형 프로모션 진행 시 발생하는 고객 할인 비용도 전액 G마켓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중소 셀러 전담 조직(AM)을 신설해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신규 셀러에게는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로 수수료’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G2 글로벌’로 200개국 역직구

글로벌 마켓 전략은 신세계와 알라바

바의 조인트벤처(JV)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역직구 확대가 중심이다.

G마켓은 ‘G2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셀러가 해외 판매 동의만 하면 번역, 물류, CS, 세금 등 복잡한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미 알라바바 계열의 동남아 플랫폼 ‘라자다(Lazada)’와 연동을 시작, 1억 60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한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에 돌입했다. 지마켓은 이를 5년 내 200여 개국으로 확대해, 역직구 부문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거래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비전 실현의 핵심 동력은 AI다. 지마켓은 연간 1000억원을 AI에 투입, 알라바바의 최첨단 기술을 이식한다. G마켓 김정우 PX(Product Experience)본부장은 “알라바바의 고도화된 검색 엔진과 딥러닝, LLM 기술로 ‘나도 모르는 내 취향’까지 파악하는 초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드러운’ 같은 감각적 표현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검색을 도입하고, 챗봇, 리뷰 요약 등 4가지 AI 에이전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2027년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해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 경쟁력

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혜택에도 연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당장 다음 달 진행하는 11월 빅스마일데이 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이마트와 연계한 장보기 서비스도 O2O(Online to Offline) 쿠팡 배송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한다.

장 대표는 “한국 이커머스는 상품, 품질, 서비스 등 기본기가 탄탄하지만, 해외 시장에 비해 쇼핑의 재미(Shoppertainment) 요소는 부족했다”며 “알라바바의 기술력과 신세계의 유통 노하우, G마켓이 가진 국내 셀러 기반을 결합해 ‘글로벌-로컬 마켓’ 비전을 실현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G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는 공정위 승인 조건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독립 운영되며, 플랫폼 통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작 이후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고객 정보는 G마켓이 단독 관리하며 최고 수준 보안 체계로 보호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다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등 멤버십 관련해서는 향후 계열사 간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민중기 특검, 공소시효 완성 재조사 어려워”

法 “매수,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어”
카카오 신뢰회복·사업재편에 속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대량 매수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주가조작 의혹’이 일단락되면서 카카오 경영 전반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인은 신빙성이 낮고, 조직적 공모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



브가 SM엔터 인수를 두고 벌였던 1조 원대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SM 주가는 단기간에 15만 원을 돌파했다. 검찰은 이를 ‘의도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매수 행위의 영향만으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스피커폰 통화로 공모를 들었다는 진술은 비현실적이며, 진술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원아시 아파트너스의 공모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조작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의 기업 신뢰 회복과 신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AI·핀테크·모빌리티 등 핵심 성장축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카카오톡에 도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금융·스테이블코인·모빌리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판결은 경영 리스크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카카오가 다시 ‘혁신 기업’의 본래 궤도로 복귀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투자 심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감원 국감

이찬진 “살벌불 부분 있다면 검토”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성과지표 체계 전면적 손볼 것”

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새 금감원장의 방향 선언과 동시에,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된 자리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국감장은 곧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화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중기 특검 의혹, 공소시효 지나”… 다주택 논란엔 “한두 달 내 정리”

여야 공방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 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역대 이익을 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은 “당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10년 금감원이 조사해 13명을 고발·통보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살벌불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5년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조환하는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원장 개인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권에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라 하면서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두 채 모두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일반적인 수준의 주택”이라며 “참고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재산신고 기한(10월 말)에 맞춰 정리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 구조 개혁…GA 제도권 편입 추진”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 손보고, 단기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를 장기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즉각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영업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의 평가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심각하다”며 “가칭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 정보보호·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KT 소액결제 피해, 스스로 조치해야”

》1면 ‘통신3사, 불법지국…’서 계속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법률 검토는 조사 완결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KT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발적 배상을 촉구했다.

KT의 장비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펌토셀 4만3506대 중 25%인 1만985대가 분실 처리됐으며 회수된 장비는 8190대(18.8%)에 불과했다. 서울의 회수율은 10.8%, 경기도는 12.7%로 저조했다.

KT는 “방문 동의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회

수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발견된 서버를 신고하지 않고 포맷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KISA에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뒤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